환경정책리포트

반월, 시화 등 6곳 '생태산업단지' 응모

산자부는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희망단지를 접수한 결과 반월 · 시화, 미포 · 온산, 여수, 청주, 포항, 진해 · 마천 · 함안 · 칠서 · 진주 · 상평 등 총 6개 산업단지가 응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전문가 · NGOs · 학계인사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구성, 서면검토 및 현지실사를 거쳐 올 하반기(10월 목표)에 시범사업에 참여할 산업단지를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많은 단지가 초기 기획사업(올 예산: 5억원)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약 1년간의 기획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추진단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단지는 3개 단지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었으며, 시범사업에서는 기획사업에서 도출된 기술개발과제 등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계획이다.

경유 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 항의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 ·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블루스카이 운동'은 환경부 · 재경부 · 산자부가 7월 1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04년 7월 1일부터 경유 상용차 3.5톤 이상에 대하여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로-Ⅲ(NOx 0.50g/㎞, PM 0.10g/㎞)로 상향조정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경유 상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조치를 2개월간 유예키로 결정하여 또다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할 책임을 방기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다른 자동차 제작사와는 달리 합의 기간내에 기술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현대자동차의 로비에 의해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무소신, 무책임 정책을 다시한번 확인케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인사동에서 정부의 유예조치에 대한 반대집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초저황 경유 보급,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조기 개편 등 경유승용차 도입에 따른 경유차환경위원회의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유예조치는 환경부 스스로 국민의 환경권 수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 경유승용차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대기오염 개선 시책중 초저황 경유 보급,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조기개편 등 사회적 합의 사항조차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기존의 관련 법규까지 개정하여 기준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민의 건강권 책임에 대한 포기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가 이번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 전면 철회 투쟁을 하는 동시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현대자동차의 마이티.카운티 등 대형 상용차 6종이 기술개발이 늦어져 새로 시행되는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함에 따라 기준 적용을 8월 말까지 2개월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한편 현대자동차측은 당초 다임러크라이슬러사와의 합작을 통해 엔진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했으나 합작계약의 파기로 독자 엔진개발이 불가피했던 데다 파워트레인 부분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에어컨냉매부산물 열분해사업" 교토의정서상의 청정개발체제 승인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는 울산화학의 '불소화합물(HFC23) 열분해 사업'을 교토의정서상의 청정개발체제 (CMD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으로

최초 승인했다. 불소화합물 열분해 사업은 울산화학에서 에어콘용 냉매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불소화합물(HCF23)을 일본기업의 열분해 기술로 소각하여 온실가스의 대기방출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하루 857kg의 불소화합물을 소각하여 연간 140만 톤의 CO_2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이번 열분해사업은 울산화학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4개 기업이 사업비의 50%를 투자하고 이윤을 배분받으며, 일본의 INEOS Fluor Japan Ltd. 가 사업비 50%를 투자하고 이윤을 배분받는 형태로 진행되며, 일본 품질보증협회가 사업운영기구로, 노르웨이의 DNV가 사업검증기관으로 참여한다.

교토의정서상의 청정개발체제(CDM)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받은 국가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효과를 본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목표로 활용하는 수단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이 사업으로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5억원을 일본기업으로부터 투자받는 한편 과거 10년간 축적된 일본의 소각경험과 노하우를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으며, 연간 80억원 이상의 배출권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매립지 가스 자원화 사업을 교토의정서상의 CMD 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립지 가스 자원화 사업을 CDM 사업으로 적극 추진키로 하였으며, 사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승인시 ▲국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환경에 안전하고 건전한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이 관련 국가정책과 배치되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컨설팅, 토양정화업 등록제 도입

환경규제가 점점 다양해지고, 기업들의 환경경영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유망업종으로 각광받는 환경컨설팅과 토양정화업이 전문 업종이 될 전망이며, 사전오염예방, 생태환경복원 등 관련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성 분석, 환경성과 평가 등을 담당하는 환경컨설팅이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산업으로 육성된다.

환경부는 열렸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환경컨설팅과 토양정화업의 등록제 도입 ▲환경서비스업 지원강화 ▲환경서비스업의 육성기반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도에는 환경컨설팅업의 등록제를 추진하여, 등록업체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기술, 환경경영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환경컨설팅은 그간 업종의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업체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법적 · 제도적 육성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도입할 토양정화업 등록제는 업체에 일정시설과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정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표준산업분류에 환경복원업종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경쟁입찰제로 변경하는 한편 평가제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정화조처리업 등의 '분뇨 등 관련영업'은 중소기업에 준하는 다양한 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활성화 방안에는 생태환경복원, 환경위해성평가 등 고급 · 첨단 기술을 중점 개발하는 한편, 환경관련 신기술이나 특허를 획득한 중소기업에 올 한해 4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판교 신도시 벤처단지 안에 환경벤처집적지인 에코밸리(Eco-Valley)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환경정책리포트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환경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은 국내 환경개선과 환경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온실가스 감축 적극 노력해야

산업자원부는 최근 EU-러시아 정상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교토의정서의 신속한 국내 비준 절차를 약속함에 따라 교토의정서 발효가 가시화되고 있는 동향에 주목하고 코엑스 컨퍼런스센터(320호)에서 에너지 · 산업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동향 및 국가협상 전략, 기후변화협약 국내 대응 기반 마련,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노력 등이 중점 논의됐으며, 산학연관 기후변화협약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특히, 학계와 연구소, 시민단체의 참여하에 기후변화협약 추진 동향과 정부의 대응정책 추진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정부와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반구축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는 현재 발효되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가 비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약속함에 따라 멀지 않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청정개발체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시장 확보와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청정개발체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국가(선진국)가 의무부담이 없는 국가(개도국)에 투자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선진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간에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EU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산자부 김정관 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90% 이상을 배출,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 산업부문에 대한 협약 대응 현황과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기후변화협약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수관정비사업 민간명예감독관제 도입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강수계 9개 시 · 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감시에 나선다.

환경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부실시공을 막고,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각 읍 · 면 · 동에서 1사람씩 모두 61명의 민간명예감독관을 선발해 2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명예감독관은 공사장에 직접 출입하여 오접합이나 시공불량 등 공사과정 전반을 감시하며, 지역주민의 불편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전달하는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민간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수관거는 지하에 매설되는 특성 때문에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었으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명예감독관제 도입으로 공사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용인시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등 팔당호 인근 9개 시 · 군의 하수관거 874㎞를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모두 6천5백억원이 투입된다.